

## 참고 8.

### SVB·CS 사태의 주요 내용과 정책당국 대응 사례 및 시사점<sup>1)</sup>

2023년 상반기중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 상황이 수차례 발생하였다. 2023년 3월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이하 'SVB') 등 일부 은행이 파산하였으며,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도 글로벌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이하 'CS')가 파산 위험을 겪은 후 UBS에 인수되었다. 각국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적절한 대비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시장참가자들의 우려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SVB, CS 등의 금융기관이 최근의 시장 불안을 유발하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정책당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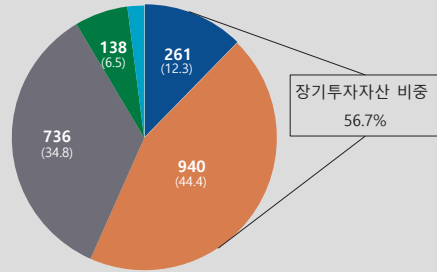
#### SVB 등 미 은행 파산 사태

SVB<sup>2)</sup>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 금융 특화 은행으로 특히 코로나19 이후 투자가 늘어난 바이오 및 첨단기술기업들의 거액 예금을 바탕으로 자산 규모가 급증하였다. 2020년 3월말 620억 달러 규모였던 예금수신 규모가 2022년말에는 1,754억 달러로 약 2.8배 급성장한 것이다. SVB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저금리 환경하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조달 자금의 상당수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미 장기국채에 투자하였다.

#### 파산 사태 전 SVB 은행 자산구조<sup>1)2)</sup>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등 ■ 대출 ■ 현금 ■ 기타

(억달러, %)



주: 1) 2022년말 기준

2) ( ) 안은 총자산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SVB(Silicon Valley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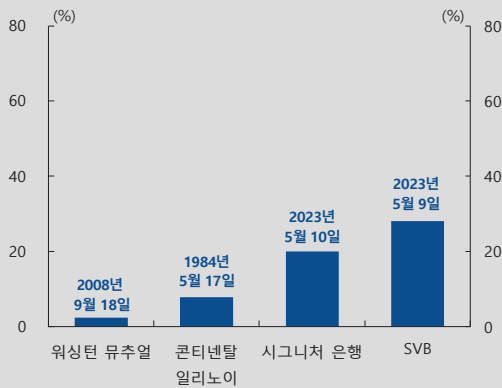
그러나 2022년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상소비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미 연준이 급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SVB는 거액의 미국채 평가손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시장에서 SVB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예금주들의 인출 요구가 급증하였고 SVB는 뱅크런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절차에 돌입(3.10일)하였다. 또한 SVB 파산의 영향으로 뱅크런 현상이 여타 은행으로 확산되면서 시그니처 은행(Signature Bank)이 추가로 파산(3.12일)하였으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First Republic Bank)은 민간 대형은행들의 긴급자금지원 조치(300억 달러 공동예금 예치, 3.16일) 등에도 불구하고 회생에 실패하여 결국 파산 처리되었다.<sup>3)</sup>

1) 본고는 김혜연·허정(안정분석팀)이 작성, 박구도(금융안정기획부장)·이정연(안정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2) SVB는 자산 규모가 2022년말 기준 2,090억 달러로 미국 내 자산기준 16위 규모의 은행이었다.

3) 시그니처 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2022년말 기준 미국내 은행 자산 순위에서 각각 29위(1,104억달러)와 14위(2,126억달러)를 차지하였다.

## SVB 및 시그니처 은행의 일중 예금인출률<sup>1)</sup>



주: 1)뱅크런 이전 총예금 대비 일중 예금인출액 최고치 기준  
 자료: 미 연준 재인용(Financial Stability Report, May 2023)

미 금융당국은 신속한 개입을 통해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규제당국에 의해 임시 인수자로 지정된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SVB 및 시그니처 은행 등의 자산·부채를 즉각 인수<sup>4)</sup>하여 가교은행을 설립하고 예금보호대상 이 아닌 예금까지 완전히 보호하는 조치를 발표<sup>5)</sup>하였다. 연준은 파산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등에 소요되는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교은행의 보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sup>6)</sup>하였으며 FDIC는 동 대출 전액에 대한 상환을 보증하였다.

또한 미 연준은 SVB 파산 직후 여타 은행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 Bank Term Funding Program)을 마련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예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미 국채나 MBS 등 안전자산으로 한정된 적격 담보에 대해 액면가로 최대 1년까지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로 투자심리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BTFP와 기존 대출 프로그램 비교

	BTFP	기존 대출 프로그램
대상기관	예금취급기관(은행, 저축·신용조합, 외은지점) 중 재할인창구(Discount Window) Primary 기관	대상기관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Primary와 Secondary 등으로 구분
적격담보 <sup>1)</sup>	미 국채, 정부 기관채, 정부기관 MBS (안전자산으로 한정)	미 국채, 정부 기관채, 정부기관 MBS, 외국정부 채권, 국제기구 채권, 회사채, ABS, CDO, CLO, CD, ABCP 등
담보평가	액면가 (par value)	시가 (fair market value)
담보인정비율	100%	100 <sup>2)</sup> -59% (종류·만기별 상이)
대출기간	최대 1년	최대 90일 (primary 기준)
이자율	OIS(1년물) + 10bp	미 연준 정책금리 (primary 기준)

주: 1) BTFP 적격담보 범위는 연준 규정(12 CFR 201.108(b)) 상의 공개시장운영(OMO) 대상 채권에 한함

2) 밀축된 국채, 정부기관채, 정부기관 MBS(BTFP 적격담보 증권과 동일)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3.13일 이후)

자료: BTFP "Frequently Asked Questions(FAQs)"

SVB 등이 파산하게 된 1차적 원인으로 자금 조달 및 운용 측면에서 특정 부문에 대한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 위험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다. SVB의 경우 국채 일변도의 투자로 금리 급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발생이 불가피했으며, 소수 벤처기술기업의 거액예금 의존도가 높아 뱅크런에도 더 취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2018년 이후 자산 규모 2,500억 달러 미만 은행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sup>7)</sup>되면서 감독당국이 SVB 등의 은행에 대해 적절한 감시·감독을 수행하지 못했던 점도 이번 사태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4) FDIC의 임시 인수를 거쳐, SVB는 퍼스트 시티즌 은행(3.26일)에, 시그니처 은행은 뉴욕 커뮤니티 은행(3.19일)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JP모건 체이스 은행(5.1일)에 각각 인수되었다.

5) 동 조치로 인한 FDIC의 손실은 약 225억 달러(SVB 200억 달러, 시그니처 은행 25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향후 부보은행에 대한 추가 예금보험료 부과로 충당될 계획이다(미 연준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6) 미 연준은 도드-프랭크법안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의 구제(bail-out)를 위한 직접 대출이 불가능하나, 예금취급기관인 가교은행에 대해서는 적격 담보에 대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위기 국면에서 소셜미디어 확산과 금융 서비스 혁신의 결합으로 뱅크런이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8)</sup>. 은행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마자 이 소식이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었고 이에 예금주들이 모바일 뱅킹 등을 이용해 동시다발적으로 인출을 시도하면서 자산 규모 수천억 달러 규모의 은행들이 단 수 일만에 파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정책당국이 재할인창구 등 통상적인 유동성 공급 방식으로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이유다.

### CS 등 유럽 은행 부문 위기

스위스 대형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CS)<sup>9)</sup>는 지난 수년간 거액투자손실 등의 내부 경영문제<sup>10)</sup>로 경영 여건과 시장 평판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SVB 사태 등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스위스 정부와 금융당국은 유동성 지원을 통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한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스위스 1위 은행인 UBS가 CS를 인수하도록 조치하였다.

### 인수 직전 CS 주가 및 CDS 프리미엄



자료: Bloomberg

스위스 당국의 빠른 대응으로 CS 위기가 여타 유럽 은행으로 확산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으나, UBS 인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몇가지 이슈가 부각되었다. 먼저 UBS가 CS를 인수하면서 스위스 감독당국이 CS의 조건부자본증권(AT1 채권)을 전액 상각 처리하도록 결정함으로써 해당 증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주주보다도 먼저 손실을 감수<sup>11)</sup>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또 한가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미불사(Too Big to Fail)’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규제당국이 마련해 놓았던 은행정리계획이 현재의 금융환경 하에서는 실행이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이 더욱 심화되고 자금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참가자들의 군집행

7) 미 정부는 2018년 제정된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 법안(EGFRCPA)에서 자산 규모 2,500억 달러 미만 은행(Category IV)을 유동성 규제 및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8) 미 연준의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뱅크런으로 파산한 워싱턴 뮤추얼(Washington Mutual)의 경우 일중 최고 인출률(뱅크런 이전 총예금 대비)이 2% 수준이었으나, SVB와 시그니처 은행의 경우 동 비율이 20%를 상회하였다. 1984년 파산한 콘티넨탈 일리노이(Continental Illinois)의 경우 일중 최고인출률이 7.8%를 기록한 바 있다.

9) CS는 2022년말 총 자산 5,314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스위스 2위(1위는 UBS) 은행으로, FSB가 지정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 중 하나이다.

10) CS는 2021년 헤지펀드社 아케고스의 파산으로 54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바 있으며, 그 밖에도 뇌물(2021년), 자금세탁 및 세금 탈루(2022년), 고객정보 유출(2022년)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평판이 크게 악화되었다.

11) 이에 반해 CS은행의 주주들은 CS주식 22.8주당 UBS주식 1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일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동의 규모와 강도가 커진 만큼 시장 불안 없이 질서있는 정리를 도모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정리가 아닌 인수·합병 위주의 처리로 일부 금융기관이 더욱 대형화된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 정책적 시사점

최근의 SVB, CS 등 은행 위기 상황은 개별 국가와 글로벌 금융시장 구분없이 위기 상황의 전파 속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빨라졌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기술 발달로 모바일·인터넷 금융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나타난 취약성에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각 부문별 시장 상황을 미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 발생시 이를 조기에 포착하여 대응함으로써 시장에 과도한 불안심리가 조성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의 위기 상황에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전례없이 신속하고 전격적인 조치를 활용해 위기를 조기 진화하였다. 발표 당시 해당 조치들에 대해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시장 심리를 조기에 안정시킴으로써 당초 예상보다 적은 지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보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최근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금리변동 등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는 기존의 규제와 대비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디지털뱅킹 활성화, SNS를 통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당국도 금융기관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을 통해 복원력을 수시로 점검하고 금융기관들이 유사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자본 여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구조를 점검하고 SNS를 통한 뱅크런 발생시 신속하게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